관계부처 합동	보 도 자 료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3.0	보도일시	2015년 6월 30일 브리핑(오전 10:30)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별 지 참 조
	배포일시	2015. 6. 29. / 총 15매

2030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배출전망치(BAU)(851백만 톤) 대비 37%으로 확정

- 정부 제3안(25.7%)를 채택하되, 나머지는 국제시장을 통해 감축 -

- 신기후체제 출범에 선제 대응하고 국제사회 책임 다해 -

<보도요약>

◇ 정부는 올해 12월 도출 예정인 신기후체제를 앞두고 우리나라의 자체적으로 결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30년 배출전망치**(이하 **BAU) 대비 37%'**로 결정했다.

○ 그동안 사회적 공론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제조업 위주의 성장 경제구조를 감안할 때 대폭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어렵고, 국내 산업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으나,

○ **한국의 국제적 책임***과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 등 그동안 쌓아온 **기후변화 대응 리더쉽 등을 고려하고, 에너지 신산업 및 제조업 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당초 감축 시나리오보다 목표수준을 상향 조정했다.

* 한국은 이산화탄소 배출 세계 7위(연료 연소),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 16위, 1인당 배출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6위에 해당 ('12년 기준)

◇ **이에 따라 녹색성장위원회는 기존 목표보다 강화된** 37% 감축안을 건의하였으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녹색위 건의를 수용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정했음.

○ **기존정부 제3안 25.7%를 채택**하되, 우리의 국제사회의 위상과 선도적 역할을 감안하여 국제시장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을 11.3%p를 추가하여 37%로 결정

◇ 산업계의 **직접적 부담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감축수단을 활용**

① 산업부문 감축률(산업공정 포함)은 **부문 BAU의 12% 수준**(공론화 시나리오 2)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 등의 법과 제도를 개선**

② 탄소배출은 줄이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에너지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매년 4%대 성장을 통해 '17년에는 4.6조 달러로 예상되는 **세계 에너지 신산업 시장을 선점**하도록 노력

- 에너지 신산업 시장형성을 위한 적극적 지원책 마련 및 「**(가칭) 에너지 신산업 육성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

* 제조혁신 3.0을 통해 공정혁신을 이루고, 전기차, 제로에너지 빌딩, 에너지 자립섬, 온실가스 포집 및 저장기술(CCS) 개발 등 새로운 신산업 육성

③ 기업 직접규제보다 시장·기술을 통해 산업계가 자발적 감축을 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과도한 규제는 과감히 정비**

*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함께 이산화탄소(CO_2)를 원료로 새로운 제품(예: 메탄올)을 생산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산업생산을 병행하는 기술 등

④ 기제출한 스위스, 캐나다, 멕시코(조건부) 등과 같이 **국제탄소시장 매커니즘(IMM*)을 활용**한 **해외감축**을 새로운 감축수단으로 활용하여 추가 감축잠재량 확보

*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IMM: Int'l Market Mechanism)은 신기후체제의 주요 감축수단중 하나이며, 현재 구체적인 규칙에 대한 협상이 진행중임.

⑤ **발전(원전추가 고려), 수송, 건물 등의 추가적 감축여력 확보** 및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 등 중점 지원

□ 정부는 6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황교안 국무총리는 “온실가스 감축과정을 우리나라 **에너지 신산업 창출의 계기**로 보다 **적극 활용**해 나가고

-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선도적 역**할을 해 온 점 등을 감안하여 당초 제시한 4개안보다 감축목표를 상향조정했다.”라고 말하고,

○ “의욕적인 감축목표 제출로 정부의 ‘저(低)탄소 경제’ 지향을 국제사회에 천명하되, 국내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新산업 육성 등 산업계 지원책을 다각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부는 지난 6월 11일 4개의 감축목표안*을 제시한 이후 민관합동 검토반(6.11), 공청회(6.12), 국회토론회(6.18) 등을 거쳐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 당초안(BAU 대비) : 1안 △14.7%, 2안 △19.2%, 3안 △25.7%, 4안 △3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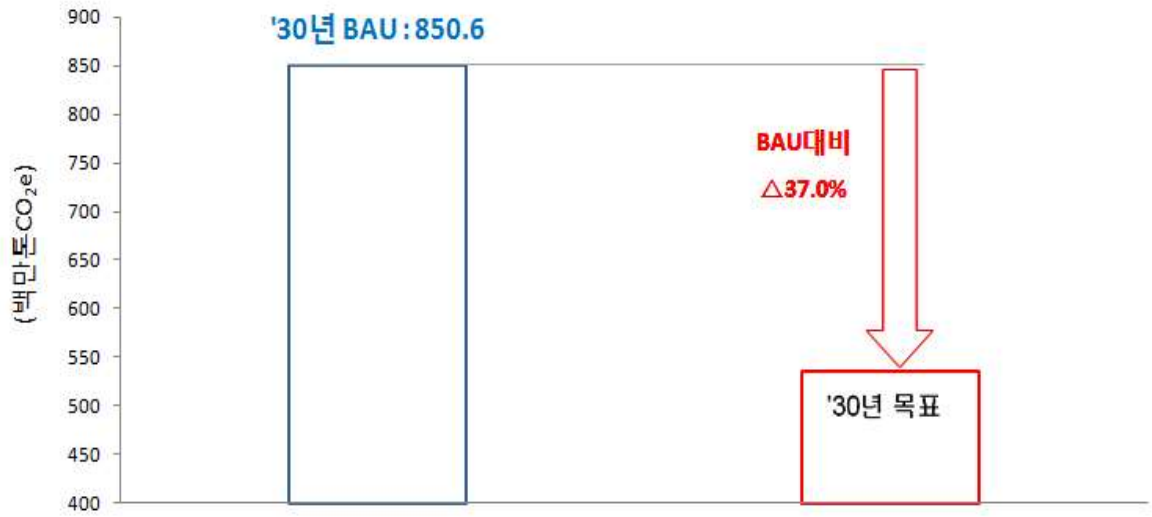
○ 공론화 과정에서 산업계는 제조업 위주의 경제구조, 이미 세계 최고수준인 에너지 효율 등을 고려하여 감축부담을 더욱 완화할 것을 주장한 반면,

○ 시민사회와 유엔(UN) 등 국제사회는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리더십과 리마결정문에 따른 현재보다 진전된 감축목표 설정 등 국제사회 수용성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정부는 공론화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과, 에너지 신산업의 적극적 계기 마련,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등을 고려, 기존에 제시된 4개 목표안보다 의욕적인 수준으로 2030년 감축목표를 확정했다.

【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 】

▪ 2030년 배출전망치(BAU) : 8억 5,060만톤CO_2-e



○ 정부는 공론화 결과 각 계의 입장과 국제사회의 우려 등을 적정 수용 할 수 있는 별도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 당초 제시한 “시나리오 3안 25.7% 감축안”과 “시나리오 3안에 국제시장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분 11.3%p를 추가한 37% 감축안”을 마련하여 녹색성장위원회에 상정하였다.

○ 녹색위는 현 정부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국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에너지 신산업 창출 및 제조업 혁신의 계기를 마련하고,

-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 등 그간 쌓아온 국제적 위상을 고려하여 기존 감축목표('20년까지 BAU 대비 30% 감축, 543백만톤CO2-e)보다 강화된 37% 감축안을 건의하였다.

- 이는 국내적으로는 기존의 정부 시나리오 3안인 25.7%를 채택하되, 우리의 국제사회의 위상과 선도적 역할을 감안하여 국제시장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분 11.3%p를 추가한 결정이다.

○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이러한 녹색위의 건의를 수용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결정하였다.

□ 정부는 이번 감축목표 제시를 계기로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 이를 위하여 에너지신산업 시장지원 및 「(가칭)에너지 신산업 육성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하고,

○ 규제보다는 시장과 기술을 통해 산업계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과감히 정비할 계획이다.

□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과정에서 산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보완조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IMM*)을 활용한 해외감축을 감축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추가적인 감축잠재량을 확보하는 한편,

※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IMM: Int'l Market Mechanism)은 신기후체제의 주요 감축수단중 하나이며, 현재 구체적인 규칙에 대한 협상이 진행중임.

○ 산업부문 감축률은 12%(공론화 시나리오 2)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 등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 또한, 기타 발전(원전 추가고려), 수송, 건물 등의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 및 감축수단을 지원함으로써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 정부는 확정된 2030년 감축목표를 비롯하여, 기후변화 적응대책, 산정 방법론 등의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기여방안(INDC*)을 6월 30일(한국 기준) 유엔(유엔기후변화협약사무국)에 제출하기로 했다.

* INDC(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 각국이 정하는 기여

□ 한편, 유엔(기후변화협약사무국)은 당사국들이 10월 1일까지 제출한 온실가스감축계획(INDC)을 종합·분석한 보고서를 올해 11월 1일까지 발간하고,

* 현재까지 미국·유럽연합(EU) 등 총 39국에서 유엔에 온실가스감축계획(INDC)을 제출

○ 이를 바탕으로 파리 당사국 총회(COP21, ’15.12월)에서 2020년부터 적용될 글로벌 신(新)기후체제 합의문을 도출하게 된다.

□ 파리 총회 이후 우리나라의 감축목표가 국제적으로 공식화되면, 후속작업으로 부문별·업종별·연도별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 그 과정에서 현행 배출권거래제 법·제도 개선방안과 세부 산업계 지원대책 등도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별지 : 담당 부서

붙임 1 : 우리나라 국가기여(INDC) 문서(국문본)

붙임 2 : 질의・응답

붙임 3 : 전문용어 설명

별 지 **담 당 부 서**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국무조정실 녹색성장지원단	양한나 과 장	044-200-2890
	정수명 사무관	044-200-2892
기획재정부 미래정책총괄과	이대희 과 장	044-215-4910
	박환조 사무관	044-215-4912
미래창조과학부 원천연구과	백일섭 과 장	02-2110-2380
	이병희 사무관	02-2110-2591
외교부 기후변화환경과	조계연 과 장	02-2100-7861
	박꽃님 사무관	02-2100-7858
농림축산식품부 창조농식품정책과	김정욱 과 장	044-204-2411
	김휴현 사무관	044-201-2422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송현주 팀 장	044-203-5370
	한종호 사무관	044-203-5371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김법정 과 장	044-201-6860
	최한창 사무관	044-201-6871
국토교통부 미래전략담당관실	윤영중 과 장	044-201-3258
	서삼호 사무관	044-201-3255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김현태 과 장	044-200-5280
	이승두 사무관	044-200-5285

붙임 1 우리나라 국가기여(INDC) 문서 (국문본)

바르샤바 당사국총회 결정문 1/CP.19 및 리마 당사국총회 결정문 1/CP.20에 의거, 기후변화협약 제2조에 명시된 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대한민국의 INDC를 제출하며, 명확성, 투명성 및 이해 제고를 위하여 관련 정보를 함께 제시함

1. 대한민국 감축공약

○ 한국은 전 경제 분야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850.6백만톤 CO2-eq) 대비 37%를 감축할 계획을 수립하였음.

○ 한국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바탕으로, 전 경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새로운 2030년 목표달성을 위해 이러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임

<table>
<tr><td>배출전망치
Baseline</td><td>(단위 : 백만톤CO_2-eq)
<table><tr><td>연도</td><td>2020</td><td>2025</td><td>2030</td></tr><tr><td>BAU</td><td>782.5</td><td>809.7</td><td>850.6</td></tr></table>○ 인구, GDP, 산업구조, 유가 등 주요 경제변수 전망을 토대로 KEEI-EGMS 모형을 운용하여 배출전망치 도출</td></tr>
<tr><td>감축공약목표
Reduction level</td><td>○ 2030년 BAU 대비 37% 감축</td></tr>
<tr><td>대상부문
Coverage</td><td>○ 국가 전 부문이 대상</td></tr>
<tr><td>섹터
Sectors</td><td>○ 부문별로 에너지(energy), 산업공정(industrial process and product use), 농업(agriculture), 폐기물(waste)은 대상에 포함되며 LULUCF(land 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 포함여부는 추후 결정</td></tr>
<tr><td>대상가스
Scope</td><td>○ Carbon Dioxide(CO_2), Methane(CH_4), Nitrous Oxide(N_2O), Hydrofluorocarbons(HFCs), Perfluorocarbons(PFCs), Sulphur hexafluoride(SF_6)</td></tr>
</table>

온난화지수 Metric	○ 1995년 IPCC 제2차 평가보고서의 지구온난화지수 (GWP) 적용하여 이산화탄소 환산톤 계산
배출량 산정 Inventory methodology	○ 2014년 12월 제출한 “격년갱신보고서”와 동일한 산정방법론을 적용 ○ IPCC 1996 가이드라인을 사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을 산정하였으며, 일부 부분은 - 농업분야 벼 재배(4C), 폐기물 분야 기타(6D) - IPCC 2006 가이드라인 사용
국제탄소시장 Int'l Market Mechanism	○ 대한민국은 2030년 감축목표를 이행함에 있어, 관련 규정과 기준에 따라 국제탄소시장을 부분적으로 활용할 계획임
토지부문 포함 Land sector	○ 감축목표 이행을 평가하는데, 토지부문 배출량 및 흡수량을 포함할지 여부와 그 방법을 추후에 결정

2. 기여방안 수립과정 / Planning Process

2.1. 2030년 감축목표 수립 프로세스

○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협의체, 기후변화대응TF를 구성하여 우리나라 기여방안 수립을 총괄적으로 조정하였음

○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위한 기술적 분석작업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전문기관이 공동작업반을 구성하여 수행하였음

○ 감축목표에 대한 민간부문 의견 수렴을 위해 시민사회와 산업계가 추천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Post-2020 민관합동검토반」을 구성하여 공동작업반에서 도출한 분석결과를 검토하고, 공청회,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대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음

○ 이를 바탕으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안)에 대한 녹색성장위원회 심의 및 정부 내 확정 절차 등을 거쳐 대한민국의 기여방안을 설정함

2.2.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분야별 노력

○ 2009년 한국은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목표를 발표하고 2010년 4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시 이를 명문화하였음

○ 또한, 부문·업종·연도별 감축목표를 2011년 7월에 결정하였으며, 부문별 이행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해 2014년 1월「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법제화, 유관계획 마련 등의 노력을 해왔음

○ 먼저, 산업부문에서는 2012년부터「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시행하여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보다 비용효율적인 감축을 위하여 2012년에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15년부터 아시아 국가 최초로 전국 단위「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는 바, 525개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가 전체 배출량의 67.7%를 차지함

○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전환 부문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의무화하고 확대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비를 보조하고 있음

○ 건물 부문에서는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마련, 친환경주택 성능평가제도 등으로 건물의 설계부터 운영까지 에너지효율 관리를 추진하고 있음

○ 수송 부문에서는 친환경 대중교통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자동차의 저탄소화를 위해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을 도입, 강화해 나가고 있음.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 배출기준의 경우 2015년 140g/km에서 2020년에는 97g/km로 강화하였음. 아울러 저탄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세제감경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부문별로 감축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는 한편, 산업, 발전(전환), 건물,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다량 배출업체(사업장)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산정·보고·검증(MRV) 체계를 구축, 관리해 나가고 있음

2.3 2030년 감축 목표 이행을 위한 향후 계획

○ 국제적으로 감축목표가 확정되면 기여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수립할 예정임

3. 적응 / Adaptation

○ 대한민국은 기후변화로 인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2010년에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여 이행 중임.

○ 또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15년부터 기초 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 세부 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였음

○ 국가 차원에서 취약성 평가, 리스크 평가를 위한 지원도구를 개발하고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통합적·정량적 평가 R&D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대한민국은 기후변화 적응역량을 강화한 “기후안전사회(Climate Friendly and Safe Society)” 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기후변화 감시·예측·분석 인프라의 확충
- 재해 예방 및 안정적 물 공급 관리체계 조성
- 기후변화에 강한 생태계 조성
- 기후변화 적응형 사회·경제구조로 체제 전환
-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 관리 강화

4. 공정성·의욕성 / Fairness and ambition

○ 한국은 전 세계 온실가스의 약 1.4%(LULUCF 포함, WRI CAIT 3.0)를 배출하나, 최대한 공정하며 의욕적인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임.

○ 대한민국은 제조업 비중(2012년 기준 32%)이 높은 산업구조를 갖고 있으며, 특히 주요산업 부문의 에너지 효율이 높아 감축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임. 또한 후쿠시마 이후 원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저하되어 주요 감축 수단인 원전의 활용에도 한계가 발생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2030년 감축목표는 IPCC 제5차 평가보고서에서 제시한 2050년 전 세계 감축 권고기준(2010년 대비 40～70% 감축)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설정하였음

○ 아울러, 지구온도 2℃ 내 상승 억제라는 기후변화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IPCC 제5차 보고서의 권고수준에 부합하도록 노력해나갈 예정임

붙임 2 질의응답(Q&A)

1. 신(新)기후체제란?

○ 1997년 체결된 교토의정서는 선진국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였으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개도국도 함께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 이에 국제사회는 '11년 제17차 더반 당사국총회(COP17)에서 교토의정서의 후속체제로 선진·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2020년 이후 신(新)기후체제 설립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였다.

○ 이에 따라 모든 당사국들은 신(新)기후체제에 기여할 INDC(2020년 이후 감축목표 포함)를 UN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금년 파리 당사국 총회에서는 2020년부터 적용될 신기후체제 합의문을 도출할 예정이다.

2. 2030년 감축목표를 6월에 제출해야 하는 이유는?

○ 금년 말 신기후체제 합의문 도출 등 성공적인 신기후체제 출범을 위해 국제사회는 주요 국가들이 우선적으로 INDC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 이에 따라 미국, EU 등 선진국들은 금년 3월에 이미 INDC를 제출하였으며, 그 외의 주요 국가들도 6월까지는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 우리나라도 신기후체제 출범에 기여하기 위한 국제사회 흐름에 맞춰 INDC를 6월말 제출하기로 결정하였다.

3. 2030년 감축목표의 법적 구속력은?

○ 2030년 감축목표는 선진·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국제약속으로, 우리나라가 '09년 발표한 자발적 성격의 2020년 감축목표와는 성격이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 다만, Post-2020 감축목표의 구체적인 법적 성격은 금년('15.12) 파리에서 도출될 신기후체제 합의문의 내용에 의해 결정될 예정이다.

4. 다른 나라들도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는가?

○ 지금까지 유엔에 제출된 각국의 기여방안(INDC)을 분석해보면 스위스, 캐나다, 멕시코(조건부 목표), 모로코, 리히텐슈타인이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참고 **국제탄소크레딧 활용 사례**

○ **(스위스)** 부분적으로 국제탄소크레딧 활용

· Switzerland will realize its INDC mainly domestically and will partly use carbon credits from international mechanisms.
· (보도자료) At least 30% of this reduction must be achieved within Switzerland itself. The rest may be attained through projects carried out abroad.

○ **(캐나다)** 강건한(robust) 시스템 구축을 조건으로 활용

· Canada may use international mechanisms to achieve its 2030 target, subject to robust systems that deliver real and verified emissions reductions.

○ **(모로코)** 국제탄소시장메커니즘 활용을 배제하지 않음

· Morocco does not exclude the possibility of using these mechanisms to achieve its conditional and/or unconditional targets.

○ **(멕시코)** 조건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신뢰 높은 양자·지역·국제 시장 메커니즘 활용 필요

· (무조건부) Mexico's unconditional INDC commitment will be met regardless of such mechanisms.
· (조건부) Achieving our conditional goal will require fully functional bilater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market mechanisms.

○ **(리히텐슈타인)** 해외 감축을 보완적 수단으로 활용

· Liechtenstein aims at the supplemental realization of emission reductions abroad.

붙임 3 전문용어 설명

○ 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 Conference on Environment & Development : UNCED)에서 서명

- 1994. 3월에 발효. 현재 195개국 및 EU가 가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3.12월에 47번째로 가입

○ 기후변화 당사국 회의(COP, Conference of the Parties) : 기후변화 협약 관련 최종 의사 결정기구로서 협약의 진행을 위해 일년에 한번 회의를 가짐. 1차 총회가 '95년 베를린에서 개최된 이후 매년 개최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for Climate Change) : 1988년 세계기상기구와 유엔환경계획이 공동으로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하고자 설립. 현재 세계 195개국이 회원국으로 활동. 각국 과학자들이 참가하여 기후변화 평가보고서를 주기적으로 발간하고 있으며, 이는 기후변화 관련 국제논의의 과학적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 **배출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 :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전망치. 즉, 국민경제의 통상적 성장 관행을 전제로 유가변동·인구변동·경제성장률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미래의 온실가스 배출 추계치

○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International Market Mechanism) : 다른 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및 거래, 국제적 배출권 시장 거래 등 시장 원리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 체계

○ **CO_2-e** : 이산화탄소 등가를 뜻하는 단위로서, 온실가스 종류별(CO_2, CH_4, N_2O, HFC, PFC_S, SF_6) 지구온난화 기여도를 수치로 표현한 지구온난화지수를 곱한 이산화탄소 환산량